

# 유노조 · 무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송민수\*

본고는 유노조 · 무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업체패널자료(WPS 2005, 2007, 2009, 2011, 2013 연결자료)의 사업체 특성을 패널가중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유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표 1>은 유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이다. 대부분의 유노조 사업체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민간에 비해 공공이,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설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유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2005년 (N=7,517)			2007년 (N=7,989)			2009년 (N=8,494)			2011년 (N=8,903)			2013년 (N=9,725)		
	있음	없음	전체	있음	없음	전체	있음	없음	전체	있음	없음	전체	있음	없음	전체
30~99인	93.9	6.1	100.0	92.1	7.9	100.0	83.3	16.7	100.0	90.0	10.0	100.0	81.5	18.5	100.0
100~299인	94.9	5.2	100.0	94.7	5.3	100.0	91.3	8.7	100.0	89.7	10.3	100.0	94.2	5.8	100.0
300~499인	96.3	3.7	100.0	98.5	1.5	100.0	90.1	9.9	100.0	90.6	9.4	100.0	93.1	6.9	100.0
500인 이상	97.0	3.0	100.0	98.6	1.4	100.0	89.9	10.1	100.0	95.0	5.0	100.0	92.8	7.2	100.0
민간부문	94.7	5.32	100.0	93.8	6.2	100.0	86.9	13.1	100.0	90.5	9.5	100.0	87.0	13.0	100.0
공공부문	94.8	5.21	100.0	98.9	1.1	100.0	96.5	3.5	100.0	87.6	12.4	100.0	96.9	3.1	100.0
제조업	98.1	1.9	100.0	95.2	4.8	100.0	91.6	8.4	100.0	96.3	3.8	100.0	89.5	10.5	100.0
비제조업	93.0	7.0	100.0	93.5	6.5	100.0	85.5	14.5	100.0	88.4	11.6	100.0	86.6	13.4	100.0
전체	94.7	5.3	100.0	93.9	6.1	100.0	87.2	12.8	100.0	90.4	9.6	100.0	87.3	12.7	100.0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ong@kli.re.kr).

## II. 무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무노조 사업체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비율은 유노조 사업체와 큰 차이가 있다. 무노조 사업체 가운데 노사협의회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2005년 41.2%, 2007년 28.0%, 2009년 26.4%, 2011년 14.6%, 2013년 13.3%다. 노사협의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2005년 16.8%, 2007년 24.4%, 2009년 34.1%, 2011년 29.1%, 2013년 3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규모가 작을수록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았고,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설립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무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있음	있지만 유명무실	없음	전체
2005년 (N=30,598)	30~99인	36.6	17.7	45.7	100.0
	100~299인	67.6	12.7	19.8	100.0
	300~499인	70.9	12.4	16.7	100.0
	500인 이상	73.5	8.6	18.0	100.0
	민간부문	41.9	16.9	41.3	100.0
	공공부문	61.2	6.1	32.7	100.0
	제조업	53.0	18.2	28.8	100.0
	비제조업	38.8	14.1	47.1	100.0
	전 체	42.0	16.8	41.2	100.0
2007년 (N=31,022)	30~99인	43.1	25.8	31.2	100.0
	100~299인	69.2	17.6	13.2	100.0
	300~499인	67.6	22.8	9.6	100.0
	500인 이상	77.5	14.2	8.4	100.0
	민간부문	47.6	24.4	28.0	100.0
	공공부문	75.0	18.8	6.3	100.0
	제조업	53.9	24.1	22.1	100.0
	비제조업	48.9	20.5	30.6	100.0
	전 체	47.6	24.4	28.0	100.0
2009년 (N=33,244)	30~99인	35.4	34.9	29.8	100.0
	100~299인	55.8	32.3	12.0	100.0
	300~499인	65.3	24.1	10.6	100.0
	500인 이상	68.8	23.9	7.3	100.0
	민간부문	39.4	34.1	26.5	100.0
	공공부문	73.3	23.3	3.3	100.0

<표 2>의 계속

		있음	있지만 유명무실	없음	전체
2009년 (N=33,244)	제조업	43.4	35.1	21.6	100.0
	비제조업	41.1	30.9	28.0	100.0
	전 체	39.5	34.1	26.4	100.0
2011년 (N=37,100)	30~99인	52.5	31.1	16.5	100.0
	100~299인	70.6	21.7	7.7	100.0
	300~499인	82.3	16.8	1.0	100.0
	500인 이상	76.7	18.5	4.8	100.0
	민간부문	56.2	29.2	14.7	100.0
	공공부문	82.1	14.3	3.6	100.0
	제조업	58.3	31.9	9.8	100.0
	비제조업	59.9	23.8	16.3	100.0
	전 체	56.2	29.1	14.6	100.0
2013년 (N=39,904)	30~99인	49.6	35.5	15.0	100.0
	100~299인	68.4	25.4	6.2	100.0
	300~499인	68.1	26.4	5.6	100.0
	500인 이상	76.6	20.2	3.2	100.0
	민간부문	53.0	33.7	13.4	100.0
	공공부문	81.8	18.2	0.0	100.0
	제조업	57.1	35.0	9.9	100.0
	비제조업	57.6	27.5	14.9	100.0
	전 체	53.0	33.6	13.3	100.0

### Ⅲ. 무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미설치 이유

<표 3>은 무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미설치 이유다.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사협의회의 미설치 원인이 근로자들의 무관심에 기인한다는 응답이 각각 전체의 72.6%(2005년), 63.0%(2007년), 74.2%(2009년), 54.0%(2011년), 62.9%(201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경영진 반대(2.4%(2005년), 6.6%(2007년), 3.4%(2009년), 2.9%(2011년), 1.6%(2013년)), 별도의 근로자 대표조직 존재(5.2%(2005년), 7.6%(2007년), 7.3%(2009년), 6.1%(2011년), 13.2%(2013년)), 기업단위 노조가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 노조 부재(8.7%(2005년), 7.0%(2007년), 5.1%(2009년), 3.4%(2011년), 0.4%(2013년)) 등이 있었다.

〈표 3〉 무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미설치 이유

		경영진 반대	근로자들의 무관심	별도의 근로자 대표조직 존재	기업단위 노조존재/사업장단위 노조 부재	기타	전체
2005년 (N=12,612)	30~99인	2.3	74.0	5.0	7.7	10.9	100.0
	100~299인	2.9	56.1	7.9	18.8	14.2	100.0
	300~499인	16.0	53.8	3.1	18.4	8.7	100.0
	500인 이상	0.0	50.5	4.1	41.3	4.1	100.0
	민간부문	2.4	72.6	5.2	8.8	11.0	100.0
	공공부문	0.0	53.1	6.3	3.1	37.5	100.0
	제조업	4.0	75.3	5.3	11.4	4.0	100.0
	비제조업	1.8	61.7	3.8	6.4	26.3	100.0
	전 체	2.4	72.6	5.2	8.7	11.2	100.0
2007년 (N=8,674)	30~99인	7.2	62.4	8.0	6.6	15.8	100.0
	100~299인	0.0	72.5	0.0	10.9	16.6	100.0
	300~499인	0.0	56.3	15.0	13.6	15.0	100.0
	500인 이상	0.0	45.1	20.4	27.1	7.4	100.0
	민간부문	6.6	63.0	7.6	7.0	15.8	100.0
	공공부문	6.6	63.0	7.6	7.0	15.8	100.0
	제조업	4.5	63.5	4.2	10.5	17.2	100.0
	비제조업	7.1	67.2	8.3	4.9	12.5	100.0
	전 체	6.6	63.0	7.6	7.0	15.8	100.0
2009년 (N=8,787)	30~99인	3.4	74.3	7.7	4.5	10.0	100.0
	100~299인	3.7	68.5	3.5	12.9	11.4	100.0
	300~499인	0.0	92.9	0.0	7.1	0.0	100.0
	500인 이상	5.4	94.6	0.0	0.0	0.0	100.0
	민간부문	3.4	74.2	7.3	5.1	9.9	100.0
	공공부문	0.0	0.0	0.0	0.0	100.0	100.0
	제조업	6.0	78.1	4.1	3.9	8.0	100.0
	비제조업	8.1	1.9	63.6	7.4	19.0	100.0
	전 체	3.4	74.2	7.3	5.1	10.0	100.0
2011년 (N=5,428)	30~99인	2.5	53.6	5.8	2.9	35.2	100.0
	100~299인	8.2	54.8	9.8	8.9	18.4	100.0
	300~499인	0.0	100.0	0.0	0.0	0.0	100.0
	500인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민간부문	2.9	54.1	6.1	3.4	33.6	100.0
	공공부문	0.0	0.0	0.0	0.0	100.0	100.0
	제조업	0.0	61.5	5.0	8.1	25.4	100.0
	비제조업	4.1	49.8	6.1	3.3	36.7	100.0
	전 체	2.9	54.0	6.1	3.4	33.6	100.0
2013년 (N=5,074)	30~99인	1.4	63.4	14.4	0.0	20.8	100.0
	100~299인	0.0	59.7	0.0	5.9	34.4	100.0
	300~499인	0.0	56.7	0.0	0.0	43.3	100.0
	500인 이상	70.2	17.3	0.0	0.0	12.4	100.0
	민간부문	1.6	62.9	13.2	0.4	21.9	100.0
	공공부문	0.0	0.0	0.0	0.0	100.0	100.0
	제조업	0.0	89.4	2.9	0.0	7.8	100.0
	비제조업	2.0	55.7	16.1	0.5	25.8	100.0
	전 체	1.6	62.9	13.2	0.4	21.9	100.0

본고는 사업체패널자료(WPS 2005, 2007, 2009, 2011, 2013 연결자료)를 활용하여 유노조, 무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노조 유무와 사업체의 규모가 노사협의회 설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노조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들의 무관심이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KLI](#)

### [참고문헌]

배규식·김정우·김기민(2012), 『한국 고용관계의 현상 - 2005~2009년 사업체패널조사 분석 결과』, 한국노동연구원.